

국힘 지도부-혁신위 '주류 용퇴론' 놓고 갈등 고조

혁신위 압박 속도 조절·해체론 격론 외부 영입 혁신위원 사퇴설 뒤숭숭 김기현 "울산 의정보고회 시비 말라" 인요한, 원희룡 만남 공개 '여론전'

국민의힘 주류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주류 기득권 포기과 희생을 총선 승리를 위한 당내 혁신의 출발점으로 제시한 혁신위와 이에 반발하는 지도부·중진·진운(진운석열)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지난 23일 혁신위 회의에서는 비(非)정치인 출신과 정치인 출신 위원 사이 당 주류에 대한 용퇴 압박 속도 조절과 혁신위 조기 해체론을 두고 격론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박소연·이재마·임장미 등 외부에서 영입한 일부 위원들의 사퇴설까지 흘러나왔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혁신안 수용을 김 대표에게 더 강하게 압박하기 위해 당장 혁신위를 해체하자는 주장부터, 예정된 임기(12월 26일)를 다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다.

혁신위 내부 갈등은 그 자체로 김기현 지도부의 처지가 투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 안팎에서 한창 제기된 '지도부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설'을 잠재우고 총선을 현 체제로 치르려는 지도부와 진짜 '윤심'(尹心)은 그게 아니라며 혁신위를 위기탈출용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는 반대론자들의 힘겨루기가 혁신위 내부에서 압박과 이명 논쟁으로 이어졌다.

혁신위에 대한 지도부 분위기는 '무반응'을 넘어 서서 '무시'에 가깝다는 평가다.

한 지도부 인사는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혁신안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혁신위원들부터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주류 용퇴론을 사실상 일축했다.

직접 혁신위를 출범시키며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공언했던 김 대표 역시 자신을 향한 '협지 출마' 요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휴일인 전남 울산 남구 지역구를 돌며 의정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정보고회를 한다니까 왜 하나도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황당하다"고 해 사실상 울산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혁신위의 기세도 호락호락하지 않다. 주류의 강한 반발에 어수선한 내부 상황까지 겹쳐지지만, 당 주류에 대한 희생 권고를 어떻게든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인 위원장은 전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격 회동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며 원 장관의 '협지 출마' 결단에 고마움을 전하는 자리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 같은 인 위원장의 행보는 결전을 앞두고 여론전을 통해 지도부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혁신위는 주류 희생 권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당 지도부에 공식 혁신안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시점은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중진이 무조건 나쁜다는 게 아니다. 총선 국면에서 희생이 필요한 면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며 "이번 주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이 이처럼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대치하는 가운데 이번 주는 혁신위나 지도부 모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도부가 권고를 묵살할 경우 혁신위는 쇄신 동력이 고갈되면서 조기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 전망이 적지 않다.

문제는 김기현 지도부 역시 혁신위가 좌초할 경우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는 점이다. 아울러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여러 주류 측이 벌써 잊고 자신도 자구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영국 국민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해 마중 나온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尹, 귀국 하자마자 김규현 국정원장·1·2차장 모두 교체

1차장에 홍장원·2차장에 황원진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인 26일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을 전격 교체했다. 인사 잡음과 관련해 이미 경질설이 돌았던 권춘택 1차장, 그리고 김수연 2차장도 모두 함께 교체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원장과 1·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신임 1차장에 홍장원 전 영국 공사를 임명해 당분간 원장 직무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신임 2차장에는 황원진 전 북한정보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김규현 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국가 최고 안보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위상을 재정립하고 우방국 정보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신임 1, 2차장에 대해 "해외정보와 대북 정보에 잔뼈가 굵은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했다. 정치권과 정보 당국 안팎에서는 이번 국정원장 교체가 사표 수리 행식을 갖췄지만, 경질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국정

원 수뇌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국정원 인사 관련 잡음이 여러 차례 불거진 데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장 후임은 아직 지명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후임 인선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보기관 수장을 오래 비워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尹, 청문 보고서 없이 김명수 합참의장 임명

보고서 없는 20번째 장관급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26일 대통령실과 합참에 따르면 국회가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제출부 기한인 지난 24일까지 응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김 후보자를 다음날인 25일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골프 의혹과 자녀 학교 폭력 의혹 등을 문제 삼으며 청문회 막판에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해야 한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로도 여야가 김 후보자 적격

성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마감일인 지난 22일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송부는 불발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제출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이던 지난 23일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제출부 요청안을 국회에 전달했으나, 제출부 기한인 24일까지 국회는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된 20번째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용산 합참본부 연병장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열고 취임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통령실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시점 고심

28일 국무회의 상정 불투명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점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거부권 시점에 대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보다 늦춰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해

당 법안들이 28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는 여전히 미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국회 상황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번 주말인 다음 달 2일이 시한이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는 기류가 강하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고 헌법에도 어긋난다는 게 대통령실의 공통된 인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13일 김기현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으며 '온라인 필리버스터'를 통한 여론전도 벌였다.

다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소추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상황에서 대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부권 행사 시점을 놓고 신중한 모습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전라남도 JeollaNamdo SSN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증상자의 존중 캠페인

사회복지증상자를 향한 **모욕, 조롱, 비하를 멈추면**

Stop Start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때,
진정한 **복지**가 시작됩니다.

사회복지증상자를 배려하는 실천방법

- 사회복지증상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해당 서비스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세요.
-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가지며 서비스를 받을 때는 **감사의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 반말, 욕설, 희롱, 무시하는 언행을 하지 않고 **존중하는 언행**을 부탁드립니다.
- 나의 **부당한 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